

남부발전, 텍사스 에너지시장 공략 200MWh급 BESS 프로젝트 추진

HD현대일렉트릭과 EPC 체결
1억2000만달러 사업비 투입
국내 기술·자본 100%로 추진
차익거래 구조로 안정수익 노려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약 1억2000만 달러(한화 1600억 원) 규모의 텍사스주 200메가와트시(MWh)급 BESS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북미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4일 HD현대일렉트릭과 '루틸 BES S 사업'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이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국내 기업이 대규모 BESS 단독사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력가격 변동성이 큰 텍사스 전력시장을 겨냥해 추진됐다. 전력이 저렴할 때 저장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해 판매하는 '차익거래(Arbitrage)'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노린다.

총사업비 약 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남부발전이 최대 주주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리한다. 알파자산운용과 KBI그룹이 공동 투



남부발전과 HD현대일렉트릭이 지난 4일 '미국 루틸 BESS사업'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한상 KBI 그룹 부회장,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김경기 HD일렉트릭 사장, 최준혁 알파자산운용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자로 참여하고, HD현대일렉트릭이 EPC를 담당한다. 전 과정이 100%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이뤄져 'K-배터리 밸류체인'의 글로벌 확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데이터센터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불안정성이 커진 텍사스에서 BESS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선제적 진출을 계기로 미국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가스복합 중심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

오를 BESS와 같은 미래 에너지 신사업으로 확장,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나일스, 트럼볼 복합발전 등 기존 북미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순수 기술과 자본으로 힘을 합쳐 미국 핵심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BESS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산란계 기준 강화 미뤄 농가 최대2년 늦춰 적용

정부가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리는 정책의 시행을 2년 늦춘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란 산지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를 오는 2027년 8월까지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입식(들어다 키움)하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50% 확대한 0.07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이 같은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정부가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사육 환경 번호가 있다.

사육환경 4번은 기존 케이지로 1㎡당 20마리가 들어가며 사육환경 3번은 개선 케이지로 1㎡당 13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육환경 2번은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로 기준 면적은 1㎡당 9마리이며 1번은 풀아놓고 키우는 '방사'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번과 2번 환경에서 생산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전력설비 진단 신사업 가속

독일 MR과 예방진단 공동 추진
SEDA 성과 기반 해외 시장 확대
1000억 절감 효과로 글로벌 공략

한국전력이 독일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손잡고 전력설비 예방진단 솔루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한전의 독자 기술력과 MR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럽을 비롯한 183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선도 기업 MR과 예방진단솔루션(SEDA)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전의 기술 경쟁력과 MR사의 영업망을 결합해 글로벌 신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가 참석해 실시간 설비 상태 점검, 고장 사전 예방 등 양사 기술을 접목한 통합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한전이 개발한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는 설비 진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15건 이상 사고를 예방하며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실종사업을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여근택 한국전력 송변전운영처장(가운데)이 윌프리드 브로이어(Wilfried Breuer) MR사 CEO(오른쪽) 등과 예방진단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넓히고 있다.

독일 MR사는 변압기 전압조정장치(OLTC)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183개국에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MR는 기존 강점을 예방진단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한전과 함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글로벌 예방진단 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며 향후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속도전과 맞물려 각국 전력회사의 필수 과제로 부상한 만큼 이번 협력이 전력설비 진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주목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 체결

美 컨버다인 협력… 에너지 안보 강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내 유일의 우라늄 변환시설 운영사인 컨버다인(ConverDyn)과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컨버다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우라늄 변환(Conversion)은 채굴·정련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육불화우라늄 형태로 만드는 필수 과정이다. 컨버다인은 현재 미국에서 상업용 변환시설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북미 지역에서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미국 내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한미 정상외교 성과, 센트루스(Centrum)와의 협력 등과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우라늄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올림피자 본사, 포크 등 공산품 강매

공정위, 불공정 거래에 1.7억 과징금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피자엔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엔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엔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엔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

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엔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장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도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올해 임금체불 1조3421억… 17만명 피해

노동부, 첫 시·도별 체불 현황 공개
수도권 체불 6974억 전체 절반 넘어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261억 원)보다 9.5% 늘었다. 피해 노동자수는 17만305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40억 원, 4만3229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3434억 원, 4만7006명),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 순이었다. 인천도 628억 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뒷받

침했다. 경기도와 서울의 체불액을 합치면 6974억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이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지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